

애덤 스미스와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

김 광 수**

논문초록 | 본 연구는 사회후생론 또는 경제진보론의 관점에서 스미스의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를 탐구한다. 스미스는 법학과 경제학을 통합된 학문체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정치적·법률적 과정, 수준 및 내용의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과 경제의 틀 속에서 사회후생의 핵심적 척도가 노동자의 복지와 행복 수준에 달려있다는 스미스의 관점에 근거하여 국가의 실정법체계에 의한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구현 여부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후생의 개선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밝힌다.

핵심 주제어: 애덤 스미스, 법과 경제, 정의와 효율성, 노동(시장), 경제진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12, B31, K10

투고 일자: 2010. 2. 8. 심사 및 수정 일자: 2010. 3. 8. 게재 확정 일자: 2010. 5. 10.

* 이 논문은 교과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27-B00086). 소중한 논평을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glaskim@skku.edu

I. 머리말

『국부론』의 원제목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 책의 가장 주요한 과제는 사회적 후생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 내지는 발전의 원천을 설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었다. 경제학계에 잘 알려진 대로, 스미스는 자본축적, 분업, 기술진보, 인구증가 등의 요인이 경제변화의 거시동학적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원리로서는 소위 “자연적 자유의 체계”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미스의 경제변화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스미스의 경제학에서 법체도와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연관성이다. 스미스는 경제활동은 빈번히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사법적 집행을 필요로 하는 국가법체계의 직접적 영향 하에 작동하며 그 수준에 상응하는 경제성장을 낳는다고 보았다. 이는 스미스에게 있어서 통합 학문 체계인 법학과 경제학에서 정의와 효율성이 별개의 독립적 가치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은 법적 정의의 실현 여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스미스는 이러한 법과 경제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실정법체계를 분석·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실정법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한편, 스미스 경제학에서 사회적 후생 내지는 경제진보의 평가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두 번째 요소는 노동(시장)의 중요성이다. 예컨대, 스미스는 사회 전반의 후생을 진단하는 척도로서 사회 구성원 다수, 즉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복지와 행복을 거론한다. 예컨대, “임금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익은 그 사회의 이익과 엄격하게 연관되어 있다”(Smith, 1776: 266)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자 또는 노동자 다수가 빈곤에 처해 있다면 그 사회는 번영하는 사회도 아니며 행복한 사회일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보다 진보되고 문명화된 사회인가를 판별하는 규범적 기준은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총생산물 중 재생산에 상당히 유리한 소득분배(分配)를 가져가는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¹⁾

1) 스미스의 표현에 따르면,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는 행복한 사회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주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생산물 중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꽤 좋은 몫을 분배받는 것이 형평(equity)에 부합된다”(Smith,

스미스의 학문체계에서 “법과 경제”의 틀, 그리고 경제진보의 평가를 위한 최우선의 척도로서의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스미스의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에 대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는 제한적인 듯하다. 그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²⁾ Haakonssen(1981)은 스미스의 법학(法學)에 관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연구로서 윤리학과 법적 정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과 통치에 관한 이론과 역사를 포괄적으로 분석·구성한다. 그러나 동 연구는 스미스에게 있어서 법과 통치의 이론 및 역사를 도덕이론과 자연적 정의감에 기초하여 구성하는데 역점을 둔 반면, 소위 “법과 경제” 또는 정의와 효율성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후생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반면 Campbell(1984)은 이상과 같은 주류 연구에 도전하면서 대체로 “법의 경제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의 관점을 채택한다. 즉, 동 연구는 (법체계의 동감정의론적 해석보다는) 효율성 내지는 부의 극대화 논리가 민법과 형법의 형성·운영 및 그 진화에 관한 스미스의 논의 가운데 내재화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법철학과 관련하여 Posner(1994)는 Campbell과 유사하게 부의 극대화 가치규범이 스미스의 법논리의 이면에서 중시되고 우선시되는 논리라고 보는 반면, Malloy(1988, 1994)는 개인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사회윤리적 가치가 법적 판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박세일(2000)의 연구는 스미스의 동감정의론을 거론하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그의 노동시장 관련 분석을 간략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지만, 교과서의 특성상 『법학강의』 및 『국부론』에서 다뤄진 심도 깊고 폭넓은 논의가 생략되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김광수(2009)의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감정의론 및 정의의 원리가 국가의 법률체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 및

1776: 96).

2) 법과 경제에 관한 기타 연구는 다음과 같다. Cairns(1994)는 정의와 자유의 보루로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를 요약하고 있으며, Evensky(1994; 2005)는 스미스의 법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사회, 국가, 경제의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구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스미스의 체계에서 정의와 경제적 번영 내지는 경제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Fitzgibbons(1995), Lieberman(2006) 등에서 간략하게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Young(2007)은 스미스의 동감이론에 근거한 재산권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이론을 현대 신제도주의 재산권학파의 이론과 비교한다. 다른 한편 Noell(2006: 160-5)은 (법과 경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규제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경쟁의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가치개념이라고 인식하는 표준적 해석에 공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효율성은 생산, 교환 등 인류의 경제활동 및 그 역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또 다른 가치 기준이라고 본다. 그리고 스미스의 사회과학체계에서 정의와 효율성은 각각 상이한 미시적 또는 사회심리적 토대를 가지면서도 궁극적으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법적 정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이루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생활개선심리를 자극하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상기 연구는 스미스의 사상에서 법과 경제, 또는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간의 일반적 관계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제도 운용원칙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경제적 효율성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취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시도하는 바대로, 법과 경제의 관점에서 사회 후생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동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다루고자 한다면 그 법적 개념 및 경제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적 관점의 평가와 더불어, 그러한 법제도가 지니는 경제성과 및 사회후생과의 연관성에 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에 대한 서설로서의 스미스의 법과 경제학, 즉 법제도와 경제활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술한다. 이를 토대로 제Ⅲ장 및 제Ⅳ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스미스가 내린 비판적 평가를 알아본다. 제Ⅲ장에서는 전근대사회에서의 법과 경제를 고찰한다. 제Ⅳ장에서는 근대사회의 노동시장 관련 법과 경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요약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Ⅱ. 법제도와 경제활동 -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를 위한 서설

1. 국가법제도의 운용 원칙

스미스는 경제학을 현대 순수경제학과 차별되는 “정치경제학”으로 지칭하고, 이를 “입법가(立法家)의 학문”(Smith, 1776: 428)의 한 지류로서 분류한다. “입법가의 학문”, 즉 법학은 “법과 통치”(law and government)의 일반원리에 대한 고찰과 이 원리가 역사발전단계별 국가법제도의 변화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cf. Smith, 1759: 342)를 논의하는 것이지만, 이 학문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사회의 물질 토대를 구성하는 경제활동은 사회적 협력과 질서의 바탕 위에서 성립하는 반면,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경쟁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은 정치적 차원의 조정 및 규제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조정 및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는 실정법체계를 정립하여 질서유지와 통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스미스에 의하면, 국가의 실정법체계는 그 입법원리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핵심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리에 근거하여 법제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소유물, 계약 등 권리를 보호하고 그러한 권리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법률체계(공법, 사법, 가족법 등)가 있다. 둘째, 사회의 시대적 요구 또는 사회적 효용을 고려하여 입법화되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경제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정일반의 법률체계(현대법학의 용어로는, 예컨대, 경제법, 사회법 등)가 존재한다. 스미스는 후자의 법률체계는 고유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고 정책으로 집행되지만 통상 정의에 관한 최소한의 제약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cf. Smith, 1978: 5). 그리고 국가법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제활동·정책은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법적 정의와 효율성은 각각 상이한 미시적 또는 사회심리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연관성을 지닌다. 이상이 스미스의 법과 경제의 이론적 틀과 내용을 구성한다.³⁾

국부증진 및 경제성장 메커니즘의 해명에 핵심적 목적을 두고 있는 『국부론』에서 종종 다양한 법률이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는 이유는 이처럼 경제분석 및 대안제시를 위한 이론적 틀이 이룰테면, 일종의 통합학문 성격의 “법과 경제”에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법과 경제의 이론적 틀 속에서 국가의 법과 통치의 관점에서 구현해야 하는 원리는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가법체계를 통해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원칙이 구현될 때 경제적 후생의 개선과 번영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부론』의 다음과 같은 짧은 구절은 스미스의 의중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계층의 최고도의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증하는 매우 단순한 비밀이다.”(Smith, 1776: 669)

3) 이상과 같은 스미스의 인간의 내면적 도덕판단과 정의론 간의 관계, 그리고 법과 경제의 자서한 내용에 관해서는 김광수(2009)를 참고하라.

국가법제도가 견지해야 하는 이 같은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법제도와 경제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가의 모든 법체계가 규제되고 집행될 때 반영되어야 하는 정의의 원리는 무엇인가? 스미스에게 있어서 정의는 국가의 법과 통치활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을 이루며, 동시에 포괄적인 원칙과 덕목이다. 정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도덕판단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사회심리(정의감)로부터 도출된다. 구체적으로 정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분개심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동감에 의해 근거를 지니는 사회적 덕목이다. 즉, 정의는 공정한 관찰자의 분개심이 유발되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소극적 덕목으로서, 사람들이 신체, 명예, 재산 등과 관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성립한다. 반대로 생명, 자유, 인격, 재산 등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사람들이 침해할 경우에 정의는 위배되고 불의(不義)가 발생한다.⁴⁾ 국가의 법과 통치는 정의를 존중하고 불의를 처벌하기 위한 사회의 집단적 활동이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정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다음에 기술되는 자유, 안전, 평등의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히 구현된다고 본다.

두 번째, 국가법제도가 견지해야 하는 정의의 내용에 포괄되는 자유의 원칙은 법률적 개념이다. 『법학강의』에 의하면, 자유는 정의론에 근거한 법률상의 의미를 지니며, 인간행위와 제도에 우선하는 자연권(自然權)으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서, 스미스에게 있어서 자유는 인류의 생존여건 변화에 따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취득권(adventitious rights)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부여된 권리로써 합당한 이유 없이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사법(私法)상의 사람의 신체에 관한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자신의 신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Smith, 1978: 8)로서 정의된다. 이는 국가의 법률과 통치활동은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신체 활용의 권리와(경제) 행위를 인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4) 스미스의 정의론은 정의 및 사회질서의 유지가 사람 내면의 천성인 분개심과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대표적인 연구는 Campbell(1971), Haakonssen(1981)이다.

5) 『국부론』 제 1편 7장에서 “완전한 자유(perfect liberty)”는 “본인이 원할 때 자신의 업종 내지

세 번째, 법제도운용과 국가통치의 원칙으로서 거론되는 안전보장은 법적 정의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조건이다. 즉, “정의의 목적은 침해로부터의 안전(security)이며, 이는 시민정부의 토대이다”(Smith, 1776: 398). 정의의 법률체제와 법의 취지가 다른 내정일반의 법률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관계된다(cf. Smith, 1776: 331). 안전보장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국가의 법체제가 논리 내지는 형식상보다는 정의와 자유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국민의 생명 보호, 사회 구성원간의 폭력 및 무질서 방지 등 치안, 각종 자유 보장, 인격 및 재산권 침해, 외국의 침략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cf. Smith, 1776: 5-7).

마지막으로, 국가법제도의 운영상 관철되어야 하는 평등의 원칙 역시 법적 정의의 구현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적 조건에 해당한다. 평등의 원칙이란 국가가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제3자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대우의 균등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지위, 권력, 재산의 과소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질서 앞에 정의의 집행을 차별 없이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미스는 “일부 계층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의도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이 없는 가운데 상이한 계층 사람들의 이해를 어느 식으로든 침해하는 행위는 국가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정의와 대우의 평등(equality of treatment)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Smith, 1776: 654) 라고 분명하게 기술한다.

국가통치를 위한 하나의 원칙으로서의 평등의 원칙의 중요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와 안전감의 정도(程度)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법의 지배에 의존하는 점에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특정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불편부당한 정의의 집행과 사법권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⁶⁾ 그러므로 권력의 다소, 지위의 고저, 재산의 과소 여부에 따라 특정 법안에 관한 사법권의 행사가 달라지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이처럼 국가 법제도의 운영 원칙으로서 평등 원리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

는 거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Smith, 1776: 73)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6) 스미스에 의하면, “모든 개인의 자유, 각 개인이 가지는 안전감(安全感)은 불편부당한 사법(impartial administration of justice)에 의존한다”(Smith 1776: 722-3).

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스미스는 국가 통치원칙으로서의 평등은 경제적 차원의 자립(independence)이 확보되지 않고는 유효성을 지니기가 어렵다고 본다. (전근대사회의 주요 특징인) 사회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차원의 심화된 종속관계는 윤리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규범의 자율적인 내면화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규율(self-discipline)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법적 차원에서 권력을 지닌 유력자들이 국가 법제도의 운용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의 구현을 실제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스미스에게 있어서 역사발전단계상 자립의 여건에 대한 검토는 국가법제도의 평등과 정의의 원칙이 구현되었는가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주요한 선행기준이 된다.

2. 국가법제도의 운용 원칙과 경제적 후생 간의 관계

스미스의 법경제학에서 발견되는 요체는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법제도의 기본원칙과 경제적 성과와의 상호 긴밀한 연관성에 있다. 스미스는 법제도의 운용에서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원칙이 합당하게 관철되면 한 국가의 경제성과는 향상되고 사회적 후생은 증진되지만, 정의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경제진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모든 국가 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원칙의 구현과 관련된 다음의 기술은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간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가장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정의(正義)의 조직적 집행이 시행되지 않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재산의 소유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계약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국가의 공권력이 지불할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적으로 번성한다는 일은 거의 발생할 수 없다”(Smith, 1776: 910).

7) 로마제국 붕괴 이후의 근대 유럽의 경제발전과정을 기술하는 『국부론』 제 3편에서 스미스는 중세시대 영주에 대한 농민들의 경제적 종속관계는 영주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하여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거대한 침해, 경제발전의 상당한 지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학강의』에서 신분적 예속으로부터의 탈피와 자립성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는 요인이라고 기술한다. “자립은 사람들의 정직성을 고양시키는 반면에, 의존만큼 그리 많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도 없다”(Smith, 1978: 486-7). 후자의 측면과 관련된 연구는, 예를 들어, Danford(1980)를 참고하라.

이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보장되면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지닌 “생활개선의 성향”이 작용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시도하는 데서 비롯된다(cf. Smith, 1776: 345, 405, 540, 610). 그러므로 국가법제도의 운용에서 정의의 원칙의 구현은 한 국가가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선행 요건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국가의 법체계가 보장하는 자유의 원칙과 경제적 성과 간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타인에게 침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자유의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발하기 때문에 제도의 틀 내에서 개인 간 경쟁이 전개·심화된다. 그리고 경쟁의 작용을 통해 거래시장에서는 당사자 간 자발적 교환을 촉진시켜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⁸⁾ 또한 경제활동의 자유는 정태적 균형을 통한 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경쟁을 통해 분업과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고 시장수요를 늘려서 장기적·동태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본다(cf. Smith, 1776: 748).⁹⁾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 진보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법제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은 경제성장을 창출해 왔다는 스미스의 강력한 주장의 이면에는 이상과 같은 자유의 권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¹⁰⁾

세 번째, 국가통치의 원칙으로서의 안전보장과 경제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위해, 치안의 부재,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어떤 경우에는 자기통제를 하게 되며 경제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수행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법제도에 의해 안전

8) 예컨대, “한 상품의 시장가격은 오랫동안 자연가격 이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하를 유지할 수는 없다. ... 시장가격은 곧 자연가격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적어도 완전한 자유(perfect liberty)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Smith, 1776: 79).

9) 현대경제학에서 경쟁과 수확체증은 통상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Marshall (1890), Young (1928), Richardson (1975), Reid (1987) 등은 경쟁의 개념을 진화적인 의미에서 구사하는 스미스에게 있어서 경쟁은 수확체증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경제에서 분업, 수요(교역) 확대, 규모의 경제 간의 관계를 논의한 Romer (1987), Lucas (1988) 와 맥락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10) 다음을 보라.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경우 자신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려는 모든 개인의 자연적 노력은 매우 강력한 추진원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도움 없이도 사회의 부와 번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정법(human laws)이 어리석게도 너무 빈번히 만들어 내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Smith, 1776: 540).

이 보장되면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적 자원개발 노력이 충만하게 되고, 안전이 결여되면 최소한의 생존활동에 국한함으로써 경제적 진보를 이루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스미스는 『법학강의』에서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경제의 진보는 가장 지체된다고 지적한다. “[부의 진보가 지체되는] 또 다른 원인은 시민정부의 속성에 있다.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사회의 초기에는 명백히도 정부가 약하고 무력했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야 정부의 권위가 이웃들의 약탈로부터 개인의 근면을 보호해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근면의 의지를 상실한다. ... 부의 진보를 저해하는 요인 중 이보다 더한 장애물은 없다”(Smith, 1978: 522).

마지막으로, 국가 법제도가 견지해야 하는 대우의 평등의 원칙과 경제적 성과와의 연관성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법제도가 허용하고 보호하는 자유와 안전의 권리가 권력자 내지는 소수 특수계층에게만 부여된다면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 참가자, 모든 노동자의 근로의욕, 근면, 창의적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없다. 두 변수간의 이러한 긴밀한 상관관계는 유럽의 경제사에서 근대 초 후진국 영국의 16세기 말 이후 경제적 부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스미스는 당시 유럽에서 영국의 보다 빠른 경제성장의 원인을 법률이 허용한 자유의 권리가 많았다는 점에서 구하면서도, 그 같은 경제성과의 보다 중요한 원천은 영국 법제도가 구현한 평등성 존중에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¹¹⁾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국가의 통치활동과 법제도가 견지해야 하는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원칙과 경제적 성과와 후생 간에 존재하는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경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스미스에 의하면, 국가의 통치활동에서 정의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토마스 홉스가 거론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대혼란에 의해 확대재생산을 지향하는 경제활동은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한다. 국가가 정의체계를 강제로 규율하는 경우에만 경제활동의 존립 기반인 안정된 사회질서가 형성·유지된다. 둘째, 국가의 통치활동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생활개선의 성향”, 또는 현대경제학적 용어로 환언하

11) Smith (1776: 610)를 보라. 또한 북미대륙과 같은 근대 영국 식민지의 법과 통치에서 평등 (및 자유) 원칙이 수반한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진보에 대해서는 Smith (1776: 584-5, 572-75)를 참고하라.

면, ‘경제활동을 효율화 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를 보이게 된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경제행위에 유인이 발생하며 이는 사람들의 생활개선 심리를 적극적으로 자극한다.¹²⁾ 셋째, 국가의 법제도에 의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부여되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며, 동시에 소유재산의 자발적 교환을 시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법경제학적인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스미스는 『법학강의』와 『국부론』 등 주요 저서에서 역사적인 경제발전의 현상을 널리 설명하고 규범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의, 안전,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스미스의 주장은 근대 유럽, 아시아, 미주 대륙의 대표적 식민지 등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이론 틀로서 활용된다. 예컨대, 스미스는 근대 초 중국의 침체와 정체는 중국의 법제도가 정의와 안전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cf. Smith, 1776: 111). 또한 국가의 법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동일한 논리는 17-18세기 영국과 스페인·포르투갈의 경제적 성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미주 대륙의 영국과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나타난 경제성장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영국과 그 식민지는 법률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견지하고 재산상의 안전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일구어냈지만(cf. Smith, 1776: 540, 572),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사법제도의 운용으로 인하여 상대적 정체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된다(cf. Smith, 1776: 586, 610).

Ⅲ. 전근대사회에서의 법과 경제

1. 전근대사회의 공법의 운용과 경제성과

스미스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수렵사회, 목축사회, 농업사회, 상업사회 등 4단

12) 스미스는 다음처럼 강조한다. “근로의 과실을 누릴 수 있을만한 안전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며 생활필수품만이 아니라 편의품 및 사치품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Smith, 1776: 405).

계를 거쳐서 진보한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근대사회는 농업, 제조업, 상업이 조화롭게 상호 분업체계를 형성하여 경제진보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법질서 운용방식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던 상업사회를 지칭하며, 전근대사회는 근대의 이전 단계, 즉 수렵사회로부터 농업사회까지의 발전단계를 의미한다.

수렵사회는 수렵과 어로가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의 근간을 차지하는 관계로 가장 수준이 낮고 미개한 상태의 단계이다. 수렵의 단계에서는 생존을 겨우 연명할 정도의 빈곤이 지배적이고 재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의한 통치를 담당하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렵사회에서는 재산상 차이가 없고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형식상 모두가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¹³⁾ 그러나 수렵사회에서 재산의 평등 때문에 외형적으로 사람들 간에 평등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복리 내지는 행복감이 증진된 상황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존에 불가결한 자원과 물질의 결핍으로 기아가 일상적이었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질서로서의 안전, 자유, 자립을 제공할만한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 스미스에 의하면, 수렵사회는 특성상 정부의 통치에 의해 안전보장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은 안전의 확보에서 전적으로 무방비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무정부상태였지만 당시에 권력과 권위를 가진 가장(家長)들의 자의적·절대적 권한 행사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자유가 결핍되고 의존성이 높아 위험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역사적 단계였다(cf. Smith, 1978: 143-4).

목축사회는 경제활동의 주요 축이 수렵을 넘어 목축으로 확장되는 발전단계이며, 농업사회는 토지를 기반으로 경작이 주된 생존방식이 되는 사회이다. 목축 및 농업사회는 수렵단계와 비교해 볼 때 인류역사의 발전 측면에서 각각 보다 진보된 국면을 형성한다. 목축사회에서부터 비로소 재산이 축적되기 때문에 정부의 법제도에 근거한 통치가 등장하며, 농업사회에서는 재산의 불균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확대·심화되는 과정을 겪는다.¹⁴⁾

13) 다음을 보라. “수렵민족들에게는 소유재산이 거의 없거나, 또는 2-3일 노동의 가치를 초과하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판관이나 일상적인 정의의 집행은 거의 없다”(Smith, 1776: 709). 또는 “사회의 제 1기인 수렵사회에서는 재산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단계에서는 모두가 가난하다는 점이 보편적 평등을 낳으며, 나이의 우위 내지는 개인적 자질의 우수성이 권위나 복종의 미약하나마 유일한 근거가 된다”(Smith, 1776: 712).

14) 다음처럼 기술한다. “수렵민들에게는 통상적인 정부통치는 없었으며 그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았다. 소와 양의 사유화가 재산의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최초로 통상적인 정부통치를 등

목축 및 농업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생존수단은 수렵단계 만큼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는 않았다. 수렵과 어로 작업에서는 생산성 증가 내지는 인구증가 시 거주지 인근 사냥감을 단기간 내 고갈시키는 반면, 목축과 농업은 일정한 정도까지 부양능력의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cf. Smith, 1978: 407-8). 수렵단계보다는 목축 및 농업단계에서 경제적 후생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와 안전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다. 목축 및 농업사회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부자 및 권력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개인 간 자립성을 약화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스미스에 의하면, 목축 및 농업사회에서 소수의 부자들에 대한 생산자 다수의 의존성의 심화는 사회적 질서로서의 정의, 자유, 안전을 훼손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목축 및 농업의 발전단계에 속한 정부의 통치 방식을 보자면, 의존관계의 정점에 섰던 소수 부자와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법권 행사를 일삼았다. 이 때문에 전근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과 생산자들은 경제활동에 유인을 주는 적절한 자유와 안전을 제공받지 못했고 정의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전근대사회에서 표출된 이 같은 국가의 통치 현황과 사회적 질서에 관한 스미스의 평가에 대해서는 농업사회단계에서의 공법(公法)의 운영에 관련된 기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법학강의』 및 『국부론』에서 인류역사의 전개와 발전 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고대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중세 유럽사회의 법, 정치, 경제에 대해 길게 기술한다. 스미스에 의하면,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로마 제국 이후의 유럽의 생존양식은 장원경제에 기반을 두고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 농업사회로 후퇴했다. 중세 초기 토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해 권력을 보유한 소수의 영주들이 소유하였으며, 토지의 경작노동과 생산은 주로 토지와 이들 영주에 전적으로 부속된 예농(serfs)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세 농업사회 단계에서의 이 같은 경제적·사회적 관계의 종속과 불평등은 생계층이 법적 질서로서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토지 점유자이고 생산자인 예농은 토지에 전적으로 속박되어 이주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경작노동 후 생활자료 이외에는 통상적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장시켰다. 소유권이 존재할 때까지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목적은 바로 부를 안전하게 지키고 부자들을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Smith, 1978: 404).

없었기 때문에 재산소유 및 거래의 자유도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지역의 영주는 토지와 그 생산물(의 분배)을 매개로 하여 관할지역의 군사 및 사법에 관한 최종판결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냈다. 스미스의 기술에 의하면, “완전사유지를 가진 몇몇의 대영주들과 봉건영주 가운데 유력자들은 모든 면에서 왕국의 소군주로 간주되었다. ... 그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서 통용되는 규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왕실법원에의 상소를 빈번히 인정하지 않았다. ... 그 당시의 법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권을 가지지 못했고,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Smith, 1978: 55).¹⁵⁾ 봉건영주들은 토지 임대, 향응 제공 등 경제적 수단 및 사법권, 민병지휘권 등 경제외적 권한을 통해 피지배계층의 안전을 위협했다.

2. 전근대사회의 노동 관련법과 경제성과: 노예법, 봉건법과 예능

스미스는 그리스나 로마시대는 물론 중세의 봉건제에 이르는 전근대사회에서 노예를 통한 경작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한다(cf. Smith, 1978: 187-8). 스미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노예제도는 전쟁포로나 범죄자를 노예로 삼는 중벌을 내렸던 것이 그 기원이 된다. 이러한 경로 이외에 노예가 충원되는 또 다른 경로는 채무의 불이행 내지는 자발적인 인신매도에 의한 방법이었다고 한다(cf. Smith, 1978: 198-99). 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인신매도에 의해 내국인이 노예가 되는 방법은 로마 시대 공화정 중기에 법률적으로 금지되었다(cf. Smith, 1978: 455). 노예제는 중세를 거쳐 근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18세기 경 노예제의 폐지를 목격한 서유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노예를 통한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생산방식의 형태를 띠었다고 지적한다(cf. Smith, 1978: 451-2). 노예제가 인류 역사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해 왔고, 또한 근대 사회에 들어서도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자연발생적인 “폭군적인 성향”(Smith, 1978: 452) 내지는 “타

15) 『국부론』에서 다음처럼 적고 있다. “무질서한 시대에는 모든 대지주는 일종의 소군주였다. 그의 차지인은 그의 신하였다. 그는 그들의 재판관이었고 평화 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입법자였으며, 전시에는 그들의 지도자였다. 그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종종 그의 인근지역에 대해, 때로는 그의 국왕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켰다”(Smith, 1776: 383).

인에 대한 지배와 권위에 대한 욕망”(Smith, 1978: 192)이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점에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시민)의 여론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자유정부의 체제에서는 노예보호 명령 내지는 노예제의 폐지가 그 소유주들의 재산상 권리와 이익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대 사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예제의 개선 및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된다(cf. Smith, 1978: 451-3; Smith, 1776: 587).

스미스가 제시한 바대로, 국가의 법체계가 견지해야 하는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노동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노예법은 명백히 정의의 체제를 일탈하는 제도이다. 노예법과 노예제도의 내용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처럼 기술한다. “첫째로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재량에 달려 있었으며 주인은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을 다룰 수 있었다. ... 둘째로 생명과 마찬가지로 노예의 자유 역시 주인의 의지에 오로지 좌우되었다. ... 셋째로 노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부과된 모든 노동에서 나온 결실은 주인에게 귀속되었다. ... 노예의 조건은 모든 측면에서 매우 비참했다. 주인들이 노예를 잔인하게 다루는 관행에 대해 전혀 제한이 없어서 가장 가혹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으며, 그들의 생명은 아주 사소한 과오에도 사라지곤 했다”(Smith, 1978: 176-7). 이는 노예제도 하에서 주인이 재산으로 삼고 있는 노예에 대하여 행하는 어떠한 권한 행사에도 제약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술은 첫째, 노예제는 일차적으로 제도와 행위에 우선하는 사람의 자연권인 생명의 처분 및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합당한 국가 법체계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즉 노예제는 취득권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와 그 자유, 즉 자연권을 침해하는 관계로 정의와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노예 주인의 권한 행사는 “완전히 자의적”이어서 안전보장의 원칙에도 어긋남을 보여준다. 노예가 노동을 통해 얻은 어떠한 결실과 유산마저도 모두 주인의 소유 재산이 되었으며, 주인이 자의적으로 가로챌 수 있었다(cf. Smith, 1978: 177).¹⁶⁾ 이러한 지적은 노예법이 국가 법체계 운용의 주요 원칙에 위배됨을 시사한다.

16) 예컨대, “농노들은 재산을 획득할 수 없었다. 그들이 획득한 것은 모두 주인에게 귀속되었고, 주인은 그것을 그들로부터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다. ... 이러한 노예는 매일의 생계유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었다”(Smith, 1776: 386-7).

한편,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중세 유럽에서는 자유보유지와 봉건법(feudal law) 제도가 도입되었고, 토지경작은 고대의 노예와는 성격이 다소 달랐지만 일종의 노예에 불과한 농노에 의해 이루어졌다. 봉건법 하의 농노는 결혼을 할 수 있고 토지에 부속되어 매매된다는 점에서 고대 노예보다는 복리의 개선을 누리긴 했지만, 자유가 없고 생활자료 이외에 어떤 재산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대 노예와 큰 차이가 없는 환경여건에서 생산하고 있었다(cf. Smith, 1776: 386-7).

이처럼 스미스는 전근대사회의 노동 관련법인 노예법과 봉건법 하의 예농제는 국가 법제도에 필연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본다.¹⁷⁾ 그리고 이처럼 법률적 관점에서 국가법체계가 정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법제도의 정의의 구현 여부는 경제활동을 효율화하려는 사람들의 유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다. 노예법과 봉건법은 노동하는 생산자들에게 생활개선 심리와 노동 의욕 등 경제적 유인을 전혀 주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폭력과 위협을 통해 억압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해야 했다.¹⁸⁾ 이러한 이유로 전근대사회는 노동을 통해 토지생산물의 최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으며 경제적 비효율성은 지속되고 사회적 진보는 더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¹⁹⁾ 스미스는 노예노동이 수반하는 경제적 성과를 다음처럼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경험은 노예에 의한 작업이 외관상 그들의 생활

17) 따라서 스미스는 노예제는 노예 자신에게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과도 모순된다고 말한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최고의 축복인 부와 자유는 노예제가 허용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이 집단의 사람들을 상당히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인간애를 지닌 사람이라면 노예제가 전반적으로 시행되면 이들 최고의 축복이 인류 대부분의 행복과 모순되므로 이 같은 축복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Smith, 1978: 185). 또한 『국부론』에서 식민지 노예제도의 운영을 논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노예법”(unfortunate law of slavery; Smith, 1776: 587)이라고 지적한다.

18) 또한 『법학강의』에서 다음처럼 지적한다. “노예들은 처벌의 두려움 이외에는 아무런 노동의 유인이 없었고 그들의 일을 용이하게 해 줄 기계도 발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처럼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Smith, 1978: 526).

19) 다음을 보라. “토지가 권력자들 간에 대규모로 분할되었을 때 노예들이 경작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매우 수익성이 낮은 경작방법이었다. ... 동일한 유형이 경작이 농노들에 의해 행해졌다. 영주는 1인당 얼마의 경작지를 나눠주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생계유지를 초과하는 수확물은 모두 반환하도록 강요하였다. 노예의 일종인 농노도 자신들의 생계유지 이외에는 근면해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의 발전에도 똑같이 불리했다”(Smith, 1978: 523).

비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노동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믿는다. 아무런 재산도 획득할 수 없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가능한 한 적게 노동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 노예가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에 충분한 정도를 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그 자신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폭력에 의해서만 그로부터 짜낼 수 있다”(Smith, 1776: 387-8).

IV. 근대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

1. 근대사회의 공법과 경제성과

스미스에게 있어서 상업사회 단계는 인류역사에서 전근대사회의 질서를 넘어서는 근대화된 사회이고 가장 문명화된 사회로서 인식된다. 상업사회는 단순히 업종으로서의 상업만이 아니라,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상업이 균형 있게 분업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발전단계를 지칭한다. 이와 동시에 근대 상업사회단계에서 상공업의 발전과 고도화는 전근대사회의 정치와 법률 운용의 수준 및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정치영역의 발전을 선행적으로 전제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스미스는 전근대사회와 비교해 볼 때 근대의 상업사회에서 정의, 자유, 안전, 평등과 같은 통치질서와 법원칙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²⁰⁾ 먼저 근대 상업사회는 정부에 의한 법과 질서의 강제와 그 차별 없는 구현으로 인하여 전(前)근대보다도 정의의 체제가 보다 완벽하게 달성되는 발전단계로서 평가된다. 예컨대, 스미스는 “상업사회의 국가들에서 ... 법의 권위는 국가 내의 가장 비천한 구성원들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할 정도로 충분하다”(Smith, 1759: 223)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근대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웠던 정의의 법제도 운용원칙과 통치질서가 상업사회에서 점진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농업사회로

20) 스미스에 의하면,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대부분의 유럽은 그 이전의 몇 세기보다 더욱 더 안정된 형태의 정부통치에 근접하고 있었다. 안전보장의 증가는 자연적으로 근로와 진보를 증가시킨다”(Smith, 1776: 199). 예컨대, Berry (1989), Rothschild (2001) 등의 연구는 스미스가 이전의 발전단계보다도 근대 상업사회를 보다 문명화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경제성장보다는 자유와 안전이 우선적으로 개선된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부터 전개된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서였다. 그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로서 스미스가 주목하는 점은 전근대사회에서 재력가·유력자와 다수 사회 구성원 간에 존재했던 예측과 의존관계로부터의 탈피 현상이다.²¹⁾

예컨대, 『국부론』 제 3편에서 서술된 바대로, 중세의 농업사회에서 근대 상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생산자들이 영주 및 지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대등한 여건에서 생존의 자립을 시도할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질서로서의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소(小) 군주로 행세한 영주와 지주들이 봉건적인 경제적 의존관계에 바탕을 둔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사법적인 영향력을 더 이상 피지배계층 내지는 생산자들에게 행사할 수 없었던 환경적 여건에 기인한다. 봉건제 하에서 농촌지역의 영주들이 지닌 군대모집권, 재판권, 부역동원권 등에 의거하여 자의적·재량적으로 벌여지던 전쟁, 폭력, 약탈, 무질서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질서의 안정과 법률에 의한 엄정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상업과 제조업은 이전에는 인근 거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인 예측 상태에서 살았던 농촌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훌륭한 통치,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점진적으로 도입했다”(Smith, 1776: 412).

한편 재력가와 유력자에 대한 종속관계의 탈피, 그리고 그들에 의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자의적인 사법적 판단 및 압제로부터의 탈피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에게 안전보장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을 의미했다.²²⁾ 이는 문명화된 상업사회에서 국

21) Salter (1992), Rasmussen (2006) 등은 스미스가 상업사회의 도래를 사회진보로서 판단한 근거로서 이러한 발전단계에서 새로운 부의 원천이 확산되고 분배의 개선에 의해 유력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정치적 권력의 분산 및 평등이 지향된 사실을 들고 있다.

22) 역사적으로 생존방식에서의 자립과 평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의 구현의 계기가 된 점에 대해 스미스는 『국부론』 제 3편에서 다음처럼 기술한다. “대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지대를 차지인과 가신을 부양하는데 지출할 때 자신의 차지인과 가신을 전적으로 부양한다. 그러나 그들이 상인과 수공업자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 종종 이러한 다수의 상공업자 개 개인의 생계유지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기여한다. 각각의 상인과 수공업자는 생계수단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백 명 또는 천 명의 상인한 고객으로부터 얻어낸다. 그러므로 상인과 수공업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 모두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만 그들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지 않다. ... 이러한 식으로 차지인은 자립했고 가신들은 해고되었기 때문에 대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사법권의 균형잡힌 집행에 간섭하거나 농촌의 평화를 교란시킬 수 없었다”(Smith, 1776: 420-1).

가의 법체계가 최소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대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법의 지배와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와 재량에 따른 인체와 재산에 대한 명령, 처벌과 약탈이 불가능해진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와 동시에 전근대사회를 특징짓는 지역 유력자의 세력 약화, 생산자와의 불가분의 의존관계의 약화 및 소멸, 그리고 상공업의 도입과 그 외연 확대의 과정은 내면적·사회적으로 예측상태에 있었던 농노, 차지인, 가신 등 피지배계층의 경제적 독립의 토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근대적 차지계약의 체결을 통하거나 토지생산과는 무관한 상공업종에 고용되어 자립함으로써 봉건적 종속관계를 벗어났다.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주거·직업·거래의 자유 등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근대 상업사회에서 국가의 통치원칙과 공법의 운용에서 이처럼 정의, 자유, 안전 및 평등의 원리가 비교적 적절히 구현됨으로써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둔 국가로서 스미스가 가장 빈번히 거론하는 사례는 영국이다. 중세의 영국은 유럽의 변방으로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 영국은 당시의 여타 국가처럼 봉건적 성격이 지배적 이었고, 16세기 초까지도 스페인,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역량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근대 초기 영국은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법률체계의 개선과 함께, 지위, 권력, 재산에 의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사법권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사람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하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요인보다도 영국의 근대적인 법률 체계 수립 및 사법권의 확립 정책은 중요한 효과를 낳았다.²³⁾ 영국 정부는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합당한 국가통치원칙을 확대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개선 노력과 근면을 자극하여 생산적 자원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영국이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구가하는 근본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스미스는 자유, 안전, 평등 등 정의의 원칙이 구현됨으로써 영국에서 발생했던 경제적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기술한다.²⁴⁾

23) 잉글랜드의 정치제도 개선과 농업의 안전에 대하여 예를 들면 다음처럼 기술한다. “봉건 귀족제의 폭정 하에서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억압하여 마음대로 지대를 인상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다. 이 점에 있어서 잉글랜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안전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연간 40실링을 받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원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점으로 인하여 그가 농장을 임대한다면 억압으로부터 보호되었기 때문이다”(Smith, 1978: 524).

“영국의 법률에 의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성과를 향유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안전은 온갖 불합리한 상업규제들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번영시키기에 충분하다. ... 영국에서 노동은 완전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 비록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유럽의 여타 지역만큼 자유롭거나 그보다 더욱 자유롭다. ; ... 그러나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은 가장 비천한 영국 시민이라도 자기 권리를 권력자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었음과 동시에 각 개인에게 노동의 결실을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근로를 최대로 가장 유효하게 장려했던, 평등하고 불편 부담한 정의의 집행이었다”(Smith, 1776: 540 and 610).

2. 근대사회의 노동 관련법과 경제성과

1) 동업조합법, 도제법 및 정주법

지금 논의된 바대로, 어떤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게 관리·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공법(公法)이 합당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하지만 국가법체계가 정치적 차원에서 정의의 원리에 근접하는 운용의 합당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특정 영역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예컨대, 경제관계법, 노동법 등)이 동일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성격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근대사회에서 ‘노동시장’에 관한 법제적 규율 및 경제적 후생과 관련한 스미스의 논의는 후자의 영역과 관련되며, 동업조합법, 도제법, 정주법 등 노동 관련 규제법이 법률적 비판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스미스는 근대사회 초기 존재했던 이 같은 노동 관련 규제법들이 국가 법률체계의 규범적 원칙인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판과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동업조합법(corporation laws)은 특정 사업을 하는 동업조합에게 배타적 특권 또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 경쟁자로부터 그 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동업조합법에 의해 조합에 속한 장인에게만 도시에서 영업의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장인들은 동업조합의 규약을 통해 향후 경쟁자가 되는 도제의 수를 제한하고 봉사의무연한도 장기인 7년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동업조합법에 의한 독점

24)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집행과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Smith(1776: 284-5, 345, 540) 참고.

권의 기원은 사회발전단계가 낮은 농업사회에서 수요가 제한되고 업종의 겸영(농부 및 목수·직조공 등)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개선하며 분업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과 안전을 도모했던 역사적 상황에 있었다(cf. Smith, 1978: 86). 하지만 근대 사회처럼 상공업의 발달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법률에 의한 보호 없이도 생존 및 업종의 세분화가 가능한 역사적 발전단계에서는 동업조합법에 의한 배타적 특권 부여는 법제도 운용의 주요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고 본다.

스미스에 의한 동업조합법에 대한 법률적 비판의 핵심은 첫째,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이 자연권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에 있다. 동업조합의 독점권은 수공업과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환경변화와 따라 유리한 직업이나 다른 장소로 자신의 의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cf. Smith, 1776: 151-2). 둘째, 동업조합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숙련과 기능 이외에는 다른 소유재산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다.²⁵⁾ 또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자본 투자를 통해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자본가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친다.²⁶⁾ 셋째, 동업조합법은 수공업과 제조업에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public nuisance; Smith, 1978: 363)이다. 이는 법률에 의한 독점권의 부여가 필수품의 획득을 어렵게 하고 그 가격을 올리며, 산업과 기술진보를 저해하는 데서 비롯된다(cf. Smith, 1978: 83-6; 1776: 144). 이처럼 동업조합법은 자연권인 개인의 자유 및 재산권의 정의를 위반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운용제도와 관련하여 동업조합법과 동일한 맥락에서 비판되는 법률은 도제법(statute of apprenticeship)과 정주법(law of settlement)이다. 도제법은 1562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때 당시 동업조합의 자치 규약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법제화하여 시장도시(market town)에서 수행되는 모든 직업으로 확대시킨

25) 다음의 표현을 보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노동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것은 모든 여타 소유의 근본적인 토대며 따라서 가장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세습재산은 그의 손의 힘과 기교에 있는데, 그가 이 힘과 기교를 이웃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면, 이것은 가장 신성한 소유에 대한 분명한 침해다. 이것은 노동자와 그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자유에 대한 명백한 잠식이다”(Smith, 1776: 138).

26) 즉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방해한다”(Smith, 1776: 152).

것이다. 도제법은 도시에서 수행되고 있던 직업에서 그 누구도 적어도 7년간의 도제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수공·수예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주법은 근대 초기 영국에서 실존한 독특한 제도로써,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빈법(poor laws)의 시행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출현한 법률이다. 1601년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 재임 기간 중에 규정된 구빈법 법령 2호에 의해 각 교구는 교구세(敎區稅)를 거두고 자기 교구에 속한 빈민 구호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같은 구빈법령에 의한 빈민 구제부담 때문에 자기 교구의 빈민을 확정짓는 문제가 중시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교구의 빈민이 자기 교구로 이주하여 구호를 받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정주법이 나오게 되었다. 1662년 도입된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던 1691년의 정주법은 이주 노동자가 도제훈련을 위해 이전 거주 교구에서 발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구에서 도제훈련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권을 얻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교구는 이 같은 증명서를 발행하기를 주저했으며, 따라서 정주법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동허가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등 노동자의 이동을 가로막는 제도로 기능했다.

이처럼 구빈 및 생활보조금 수혜자의 이주의 자유를 국지성(局地性) 원리로 제한한 도제법과 정주법에 관한 스미스의 법률적 비판은 국가 법제도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도제법과 정주법은 정의와 자유의 원리에 위배되는 법제도로써 지적된다. 예컨대, 도제법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도제법은 각 제조업종에서 도제의 수(數)를 제한함으로써 어떤 특정 업종의 소수 종사자가 다수가 종사하는 후방연관업종의 고용과 생존을 좌지우지하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노예의 상태”(slavery; Smith, 1776: 143)처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서 언급된다. 스미스는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1,000명의 방적공과 직포공의 일자리가 도제채용을 억제하는 6명의 소모공(wool-comber, 梳毛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cf. Smith, 1776: 142-3). 한편 정주법 역시 사람들의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이주와 직업선택의 여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연권에 해당하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능력발휘와 재산형성을 억제함으로써 개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²⁷⁾

27) 예를 들면, “어떤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그가 거주하려는 교구로부터 추방하는 것은 자연적 자유 및 정의의 명백한 침해다. 하지만, 자유를 매우 열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둘째, 도제법과 정주법은 가난한 노동자들(농업 및 공업 노동자 모두 포함)의 안전을 위협하고 평등을 저해하는 제도로서 비판된다. 당시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노동력 과잉 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자 할 때 재산 담보나 교구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 스미스의 지적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노동력을 제외한 어떤 재산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노동자들은 구빈과 거주업무를 담당·관리하는 각 교구의 교회위원, 빈민감독관, 치안판사의 “변덕”과 “자의”에 따라 이주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빈번히 억압과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다.²⁸⁾ 이는 도제법과 정주법이 국가의 법체계가 존중해야 하는 안전과 평등에 위배됨을 시사한다.

종합하자면, 근대사회에서 노동시장을 규제하고자 했던 동업조합법, 도제법, 정주법 등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체계가 지녀야 하는 정의, 자유, 안전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로서 비판된다. 동시에 법과 경제의 틀 내에서 볼 때,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이러한 노동시장 규제법의 경제적 성과는 효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이상의 노동관련 제도들은 자유로운 경쟁과 자원의 이동을 규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효율화하려는 의지를 억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cf. Smith, 1978: 83-4; Smith, 1776: 144, 152). 둘째, 국가 전체의 고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자 임금 전반과 국민소득 수준을 낮추며 장기적인 자본축적을 저해한다(cf. Smith, 1776: 79, 469-71, 611). 결국 이상의 노동시장 규제 제도들은 사회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지 않아 노동자의 근면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원의 낭비를 유발하며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등

다른 나라의 일반인들처럼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잉글랜드의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1세기 이상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러한 억압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 잉글랜드에서 나이 40세의 가난한 사람치고 자기 일생의 어느 부분에서 이처럼 잘못 입안된 정주법에 의해 가장 비참하게 억압당했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한다”(Smith, 1776: 157).

- 28) 스미스는 다음처럼 적고 있다. “단순노동자든 숙련공이든 어떤 독립된 노동자라도 도제나 취업에 의해서 새로운 거주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이 새로운 교구에서 일하려고 할 때 아무리 건강하고 근면하다고 해도, 노동력 이외에 재산이 없는 노동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연간임대료 10파운드의 가옥을 임차하거나, 또는 두 명의 치안판사가 교구의 구호를 받지 않을 담보로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회위원이나 빈민감독관의 변덕(caprice)에 의해 퇴거당할 수 있다. 치안판사가 어떠한 담보를 요구할 것인가는 거의 전적으로 자유재량(discretion)에 달려있다”(Smith, 1776: 154).

경제의 정태적·동태적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²⁹⁾

2) 근대사회의 경제법, 노동자 교육정책과 대항력

스미스에 의하면, 법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중립적·객관적으로 보호하는 공정한 제도적 기구로서 항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국가는 내부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실체이며, 각 하부 분파세력은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의 행사에 비교우위를 지니거나 영향력을 지닌 세력은 종종 규제권을 얻고 특혜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법제도의 규범적 운용원리로부터 일정 부분 괴리되는 현상을 낳는다.³⁰⁾

근대사회에서 제조업자, 상인 등 기업가 단체들은 특권 및 규제권 획득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입법청원(로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세력이다. 제조업자와 상인 계층은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가격통제, 생산제한, 지역제한, 획일적인 시장형태의 유도, 신규진입의 제한 등 각종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획득하고 있다.³¹⁾ 이러한 행위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권 확보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1768년 잉글랜드 조지 3세의 재임 8년에 최고임금 규제법안으로서 시

29) 이러한 노동관련 법제도에 관한 범경제학적 평가는 『국부론』 제 4편의 중상주의체제 비판 부분에서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의 본원적 과제가 “정세의 순간적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 또는 정상배”보다는 “항상 동일한 일반원칙에 의해 판단하는 입법가의 학문”(Smith, 1776: 468)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의 경제적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체계 운용의 기초 원리에 근거한 노동관련 법제도의 개혁 및 부당한 법령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들 모두에게 ...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야 한다. 즉 자연적 자유에 대한 실질적 침해에 해당하는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을 없애고, 도제법 및 정주법을 철폐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가 어느 직업이나 어느 장소에서 실직해도 기소당하거나 추방당할 두려움 없이 다른 직업을 얻거나 다른 장소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Smith, 1776: 470). 또한 이와 관련한 범경제학적 접근법과 제도 비판에 대해서는 예컨대, Smith (1776: 138, 151, 469-71)를 보라.

30) 스미스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상이한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영현실, 이익단체의 로비, 경로의존을 갖는 사회관습 및 편견 등으로 역사적으로 실정법이 자연적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왜곡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cf. Smith, 1759: 340-1). 특히 스미스의 정치와 법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Winch(1978; 1983), 그리고 권력에 의한 자연적 정의 및 법률체계의 왜곡에 대해서는 Witzum and Young(2006)을 참고하라.

31) Smith(1776: 157, 267, 471, 584, 647, 733)를 보라.

행된 특별법은 노동자의 임금억제를 위한 고용주들의 사적인 담합에 불과한 것을 국가적 차원의 규제(처벌)로 강화하여 법령화한 것이라고 스미스는 비판한다.³²⁾ 사회의 강력한 기득권 그룹의 이해관계를 법률에 반영하는 이러한 노동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우의 공정성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의 통치원리인 정의와 처우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cf. Smith, 1776: 654). 스미스는 이처럼 분배구조에서의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성안된 법안은 법률적 관점에서 “부당(unjust)”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한(impolitic)” 것으로 비판한다(cf. Smith, 1776: 530).³³⁾

하지만, 이처럼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고용자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일관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라든가 노동자의 교육을 위한 정부정책을 스미스가 견고하게 지지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가통치구조 하에서 고용주, 기업가 세력에 의해 항상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는 자연적 정의는 부분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대항력(countervailing forces) 확보 및 경쟁질서의 강화를 통해서 차선택으로나마 회복 가능하거나 균형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스미스의 신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스미스는 고용자 그룹의 은밀한 담합을 상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된 행동을 “방어적 단결(defensive combination)”(Smith, 1776: 84)로서 기술하고, 일정한 정도 세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cf. McNulty 1973: 363). 더불어 스미스는 근대 상업사회에서 하층 노동자 교육과 관련

32) “입법부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의견 차이를 규제하려고 시도할 때 그 상담역은 언제나 고용주다. 그러므로 그 규제가 노동자에게 유리할 때는 항상 정당(just)하고 공평(equitable)하지만, 고용주에게 유리할 때는 종종 그렇지 않다. ...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하시키기 위해 단결할 때, 그들은 일정한 위약금을 걸고 어떤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기로 사적인 동맹 또는 협약을 맺는다. 만일 노동자들이 일정한 위약금을 걸고 어떤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유사한 단결을 한다면, 법령은 노동자들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다. 만일 그 법령이 공평무사하게 집행된다면 고용주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Smith, 1776: 157-8).

33) 이러한 이유에서 제조업자와 상인계층이 추천하는 법제도는 신중한 검토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스미스는 권고한다. “이러한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 관련 어떠한 새로운 법이나 규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하며, 가장 면밀하고 주의깊게 오랫동안 신중히 검토한 후에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그들의 이익이 결코 사회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계급, 그리고 공중을 기만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며, 따라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만하고 억압한 적이 있는 계급으로부터 나온다”(Smith, 1776: 267).

된 국가의 제도적 통제 방안을 (실상 어느 측면에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상업사회 단계의 노동자들은 분업의 세분화에 따라 단순작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사회공동체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적·정신적 능력이 둔화되고 이해력과 판단력을 결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현안과 규제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고, 더불어 논의되는 법안의 토론·공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³⁴⁾ 하지만, 스미스에 의하면, 정부정책 및 경제발전의 성패 여부가 국민 다수의 호의적 판단과 지지 정도에 의존하는 근대 상업사회단계에서 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기초교육 지원프로그램은 자신의 후생과 연관된 정치·경제적 현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그들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효과를 수반한다.³⁵⁾

V. 요약 및 결론

스미스는 부의 원천 및 성격을 탐구하면서 전근대사회와 대비한 근대 상업사회의 위위를 부의 절대적 규모 및 분배의 상대적 균등성에서 찾는다.³⁶⁾ 이를 밝히기 위

34) 다음처럼 기술한다. “노동자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엄격하게 연관된다고 해도, 그들은 사회의 이익을 인식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 노동자의 생활상태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여유를 주지 않으며, 그의 교육과 습관은 비록 충분한 정보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통상 빠르게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에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고용주를 위해 고무, 선동, 지지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청되지 않으며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Smith, 1776: 266).

35) 이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국부론』 제 5편 부분, 즉 Smith(1776: 781-8)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스미스는 “국가는 하층 일반인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얻는다. ... 그들[교육받은 노동자들]은 당파와 선동으로 가득찬 사심을 가진 불평들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며 또한 그렇게 할 능력이 보다 커지는데, 이 때문에 그들은 정부 법안에 대해 방자하거나 불필요한 반대를 보다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Smith, 1776: 788)고 적고 있다. Alvey(2001)는 스미스가 사회질서와 인간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도덕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국가의 노동자 일반에 대한 의무교육과 그 성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김광수(2000)를 참고하라. 스미스의 교육관과 인적자본론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Spengler(1977), Bowman(1990)을 보라.

36) 스미스는 전근대사회 및 근대사회의 경제후생의 차이를 다음처럼 대비한다. “수렵과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야만민족들을 보면, ... 이러한 민족들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여 단순한 결핍 때문에 유아들, 노인들, 환자들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때로는 기아 내지는 야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거나 또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문명민족과 변역하는 민족들을 보면, ... 사회의 총노동생산물이 너무나 크기

해 스미스가 제시한 경제성장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통상 자본축적, 분업, 기술진보 등 주요 공급측 요인들과 일부 수요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순수경제학적 차원의 스미스의 모형에서 경제진보는 주로 경제변수에 의존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경제변화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그리고 더 높은 차원과 틀로서 법과 경제학에 주목하였다.³⁷⁾ 스미스는 법학과 경제학을 통합된 학문체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정치적·법률적 과정, 수준 및 내용의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과 경제의 틀 속에서 사회후생의 핵심적 척도가 노동자의 복지와 행복 수준에 달려있다는 스미스의 관점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에 관한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스미스는 윤리학의 동감이론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실제적 도덕판단으로부터 정의감(正義感)이 성립하며, 이러한 고유의 내면적인 정의감정이 “법과 통치” 또는 국가의 법제도 운용의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이 같은 정의론에 입각하여 정의와 자유, 그리고 이의 실천적 조건인 안전, 평등의 원칙이 국가 실정법에 반영되는 경향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법원리들이 실제로 관철되는 정도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후생은 개선된다고 본다. 둘째, 이러한 법과 경제의 이론에 입각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실정법 체계에 대해 스미스가 분석한 바를 고찰하였다. 즉 법제도 운용원칙으로 제시된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개념이 통시적·공시적 차원에서 실정법 운용 및 노동(시장) 관련 법률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는가에 대한 스미스의 비평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법적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구현 여부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후생의 개선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생산자(노동자)의 지역유력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의 심화는 국가 공법(公法) 상 운용에서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원칙이 이행되는 것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종 풍부하게 공급받으며, 가장 낮고 빈곤한 계층의 노동자라도 그가 절약하고 근면하다면 어떤 야만인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필수품과 편의품을 향유할 수 있다. ... [유럽의 근면하고 검소한] 농민이 다수의 아프리카 왕의 편의생활을 능가하는 정도로 유럽 왕의 편의생활이 근면하고 검소한 농민의 편의생활을 능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사실이다”(Smith, 1776: 10 and 24).

37)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다양한 차원의 틀에 대해서는 예컨대, Williamson(2000: 597)을 참고하라.

제성과의 개선을 저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류의 역사발전 단계상 주종(主從) 종속관계가 철저한 전근대사회에서 국가법제도의 운용원리가 왜곡되었으며 생산자(노동자)의 후생과 사회의 공공복리는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렀다. 반면 상업 시대에서 제조업과 상업이라는 새로운 부의 원천과 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자(노동자)의 유력자·권력자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정치적 권력이 분산되었으며 평등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경제적 의존관계의 점진적 해소 및 자립의 확대는 공법 운용에서의 진보를 가져왔고, 이는 노동자의 생활개선 심리의 적극적 자극을 통해 빠른 부의 축적 및 경제 발전을 야기했다. 결국 전근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통시적 관점에서 공법상 정의의 구현 여부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공법 운용에서 정의의 체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더 나아가 경제시스템 전반의 후생의 개선은 난망하다는 스미스의 시각을 읽어보았다. 넷째, 각 역사발전단계에서 생산과 노동(시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사법, 가족법, 경제법 등)의 운용에서도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원칙의 구현은 사회적 후생의 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스미스에 의하면, 전근대사회의 노예법 및 봉건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 자립의 환경이 개선된) 근대 상업사회의 노동시장 관련법에서도 특정 사회계층의 이해관계가 대변·반영됨으로써 법과 통치의 일반 운용원칙이 위배·왜곡되었다. 이는 생산자(노동자)의 생활개선 노력을 억제토록 작용하고 경제진보와 공공복리수준을 지체시키는데 기여했다. 다섯째, 공법상 법제도 운영이 개선된 다원화된 근대 상업사회에서도 이해관계의 계산에 민감한 상공업자는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법질서의 왜곡을 빈번하게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의의 체계로부터의 일탈이며 생산자(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꺾어 사회후생의 증진을 지체시킨다. 근대 시민국가의 역할로서 스미스가 필수적이라 본 하층 노동자 교육정책 및 방어적 단결권에 관한 공감은 기업이 집단의 노동시장 법제도의 항상적 왜곡 시도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이해력과 판단력의 제고에 기초한 대항력을 키움으로써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법·경제법 등에서 법운용의 기본원칙들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경합하는 세력 간의 평등(의존관계의 탈피)과 세력균형(대항력)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광수, “고전학파의 공공정책과 교육,” 『경제학연구』, 제48집, 제4호, 2000, pp.163-191.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 on Public Policy and Education,” *Kyong Je Hak Yon Gu*, Vol. 48, No. 4, 2000, pp.163-191.
2. _____, “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정의와 효율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7집, 제1호, 2009, pp.120-40.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s Law and Economics with Reference to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Kyong Je Hak Yon Gu*, Vol. 57, No. 1, 2009, pp.120-40.
3.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Translated in English) Park, Se-il, *Law and Economics*, Seoul: Bakyoungh Publisher, 2000.
4. Alvey, J.E., “Moral Education As a Means to Human Perfection and Social Order,”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Vol. 14, No. 2, 2001, pp.1-18.
5. Bowman, R.S., “Smith, Mill, and Marshall on Human Capital Formation,” in J.C. Wood(ed.),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1994), Vol. 7, 1990, pp.70-89.
6. Berry, C.J., “Adam Smith: Commerce, Liberty and Modernity,” in P. Gilmour(ed.), *Philosophers of the Enlightenment*, pp.113-32,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89.
7. Cairns, J.W., “Adam Smith and the Role of the Courts in Securing Justice and Liberty,” Malloy and Evensky(eds.), *Adam Smith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pp.31-61,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4.
8. Campbell, T.D., *Adam Smith’s Science of Morals*, London, Allen & Unwin, 1971.
9. _____, “Adam Smith and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in V. Hope(ed.), *Philosophers of the Scottish Enlightenment*, pp.133-156,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84.
10. Danford, J., “Adam Smith, Equality and the Wealth of Sympath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4, 1980, pp.674-95.
11. Evensky, J., “Setting the Scene: Adam Smith’s Moral Philosophy,” Malloy and Evensky(eds.), *Adam Smith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pp.7-29,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4.
12. _____, *Adam Smith’s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3. Fitzgibbons, A., *Adam Smith’s System of Liberty, Wealth and Virtue*, Oxford: Clarendon Press, 1995.
14. Haakonssen, K., *The Science of a Legislator: The Natural Jurisprudence of David Hume and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15. Lieberman, D., “Adam Smith on Justice, Rights, and Law,” in K. Haakonssen(ed.),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6. Lucas, R.E., J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1988, pp.3-42.

17. McNulty, P. J., "Adam Smith's Concept of Labour,"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4, 1973, pp.345-66.
18. Malloy, R. P., "Invisible Hand or Sleight of Hand? Adam Smith, Richard Posner,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The University of Kansas Law Review*, Vol. 36, 1988, pp. 209-59.
19. _____, "Adam Smith and the Modern Discourse of Law and Economics," Malloy and Evensky(eds.), *Adam Smith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pp. 113-50,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4.
20.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1890.
21. Noell, E. S., "Smith and a Living Wage: Competition, Economic Compulsion and the Scholastic Legac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38, 2006, pp.151-174.
22. Posner, R. A., "Law and Economics is Moral," Malloy and Evensky(eds.), *Adam Smith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pp.167-77,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4.
23. Rasmussen, D. C., "Rousseau's 'Philosophical Chemistry' and the Foundations of Adam Smith's Thought,"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27, 2006, pp.620-641.
24. Reid, G. C., "Disequilibrium and Increasing Returns in Adam Smith's Analysis of Growth and Accumula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9, 1987, pp.87-106.
25. Richardson, G. B., "Adam Smith on Competition and Increasing Returns," in A. S. Skinner and T. Wilson(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350-60.
26. Romer, P. M., "Growth Based on Increasing Returns Due to Special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1987, pp.56-62.
27. Rothschild, E., *Economic Sentiments: Adam Smith, Condorcet, and the Enlighte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28. Salter, J., "Adam Smith on Feudalism, Commerce and Slaver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13, 1992, pp.219-241.
29.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D. D. Raphael and A. L. Macfie(eds.), Clarendon Press(1976), 1759.
30. _____, *Lectures on Jurisprudence*,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eds.), Clarendon Press, 1978.
31. _____,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R. Campbell and A. S. Skinner(eds.), Clarendon Press(1976), 1776.
32. Spengler, J. J., "Adam Smith on Human Capital," in J. C. Wood (ed.),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1984), Vol. 3, 1977, pp.491-97.
33. Williamson, O. E.,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aking Stock, Looking Ahea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8, 2000, pp.595-613.
34. Winch, D., *Adam Smith's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35. _____, "Science and the Legislator," *Economic Journal*, Vol. 93, 1983, pp.501-20.
36. Witztum, A. and Young, J. T., "The Neglected Agent: Justice, Power, and Distribution in Adam Smith,"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38, 2006, pp.437-71.

37. Young, A.,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Progress," *Economic Journal*, Vol. 38, 1928, pp. 527-42.
38. Young, J., "Adam Smith and New Institutional Theories of Property Rights," Vivienne Brown (ed.), *Adam Smith Review*, Vol. 3, pp. 48-68, Routledge, 2007.

Adam Smith on Law and Economics of Labor Issues

Kwangsuk Kim*

Abstract

This paper is to explore Smith's view of law and economics in connection with labor (market) issu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dam Smith's law and economics tell us that there is an inseparable linkage between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We historically examine major labor-related laws in the *Lectures on Jurisprudence* and the *Wealth of Nations*. It may thus be drawn that a set of laws reflecting the legal principles of justice, liberty, security and equality, ultimately produce economic efficiency in a labor market, and thus increase social welfare.

Key Words: Adam Smith, law and economics,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labor market, economic progress

Received: Feb. 8, 2010. Revised: March 8, 2010. Accepted: May 10, 2010.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Myongryun-dong 3-ga, Jongno-gu, Seoul 110-745, Korea, Phone: +82-2-760-0437, e-mail: glaskim@skku.edu